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과 2013년 경제무역 정책 방향

2012년 제6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과 2013년 경제무역 정책 방향
2. 일 시 : 2012. 12. 27 (목) 16:00~18:00
3. 발표자 :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연구원 부원장 창레이(庄芮)

1. 중국 대외경제무역의 문제점

가. 대외무역은 "규모가 크지만 강하지 않으며", 해외수요의 영향을 쉽게 받음.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무역 발전은 ① 가공무역을 위주로, ② 절대다수의 수출입 (특히 수출)은 외국인투자 기업에 의해 완성되는 특징을 보였음.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수출입 규모가 날로 확대되었지만, 수익이 적고 대부분의 수익은 외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졌음.

□ 2011년 1월~12월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3조 6,420.6천만 달러를 기록함.

- 하지만, 동기대비 성장률은 22.5%로 2010년(34.7%)보다 12.2%p 하락하였음.
- 그 중 수출액은 1조 8,986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20.3% 성장하였고 수입액은 1조 7,434.6천만 달러로 동기대비 24.9% 성장하였음.
- 수출과 수입 성장률은 모두 2010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음.

표1. 2001~2011년 중국의 수출 (무역방식별)

(단위: 억 달러, %)

연도	수출 총액	일반무역 수출		가공무역 수출		기타무역 수출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01	2,660.98	1,118.81	42.05	1,474.34	55.41	67.83	2.55
2002	3,255.96	1,361.87	41.83	1,799.27	55.26	94.82	2.91
2003	4,383.71	1,820.34	41.53	2,418.49	55.17	144.88	3.30
2004	5,933.69	2,436.35	41.06	3,279.88	55.28	217.45	3.66
2005	7,619.99	3,150.91	41.35	4,164.81	54.66	304.27	3.99
2006	9,690.73	4,163.18	42.96	5,103.75	52.67	423.8	4.37
2007	12,180.15	5,385.76	44.22	6,176.56	50.71	617.83	5.07
2008	14,285.46	6,625.84	46.38	6,751.83	47.26	907.79	6.35
2009	12,016.63	5,298.33	44.09	5,869.81	48.85	848.49	7.06
2010	15,777.54	7,207.33	45.68	7,403.30	46.92	1,168.70	7.41
2011	18,986.0	9,171.24	48.31	8,354.16	44.00	1,460.6	7.69

자료출처: 상무부 연도별 대외무역 통계와 "2012년 준계 대외무역형세 보고"의 데이터를 정리

- 표1에서 보면 중국의 대외무역, 특히 수출의 주요 무역방식은 가공무역이며, 2001~2007년 사이 가공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초과하였음.
- 2008년부터 가공무역의 비중이 어느 정도 하락하기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40% 이상을 차지함.
- 가공무역의 가장 큰 특징은 "대규모 수입과 수출"이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은 "양적 확장"이고 무역으로 인해 얻은 실제 소득은 상당히 적음.
- 표2를 보면 개혁개방, 특히 2001년 이후 외국인투자 기업이 점차 중국 수출입무역의 주체로 부상하였음.
- 2001~2011년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출입은 시종일관 중국 수출입 총액의 50%~58% 정도를 차지하였음.
- 즉 수년간 중국 수출입무역의 규모 확장은 상당 부분 외국인투자 기업에 기인한 것임.

표2. 2000~2011년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출입 현황 및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연도	수출입			수입		
	전국	외자기업	비중	전국	외자기업	비중
2000	4,743.08	2,367.14	49.91	2,250.97	1,172.23	52.08
2001	5,097.68	2,590.98	50.83	2,436.13	1,258.63	51.67
2002	6,207.85	3,302.23	53.19	2,952.16	1,602.86	54.29
2003	8,512.1	4,722.55	55.48	4,128.36	2,319.14	56.18
2004	11,547.93	6,631.63	57.43	5,614.24	3,245.57	57.81
2005	14,221.18	8,317.22	58.48	6,601.19	3,875.13	58.7
2006	17,606.86	10,364.44	58.87	7,916.14	4,726.16	59.7
2007	21,744.35	12,568.52	57.80	9,562.84	5,609.54	58.66
2008	25,616.32	14,105.76	55.07	11,330.86	6,199.56	54.71
2009	22,072.66	12,174.37	55.16	10,056.03	5,452.07	54.22
2010	29,727.62	16,003.07	53.83	13,984.30	7,380.01	52.77
2011	36,419.35	18,601.56	51.08	17,460.42	8,648.26	49.53

자료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국외자 통계 2012", 일부 데이터는 상무부 외자통계 데이터를 정리

표3. 2005~2011년 외국인투자 기업의 가공무역 수출입총액 및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단위: 억 달러, %)

연도	가공무역 수출		가공무역 수입	
	외국인투자 기업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외국인투자 기업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
2005	3,466.29	83.23	2,312.46	84.39
2006	4,311.63	84.48	2,743.87	85.59
2007	5,214.62	84.43	3,096.65	84.06
2008	5,721.95	84.75	3,184.09	84.15
2009	4,937.02	84.11	2,708.02	84.01
2010	6,205.38	83.82	3,504.01	83.94
2011	6,993.25	83.71	3,849.52	81.94

자료출처: 상무부 외자통계의 연도별 데이터를 정리

- 중국 내 외국인투자 기업은 가공무역을 위주로 함.
- 국제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둔화되고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의 경제성장 동력이 부족하며 국제수요가 하락하였음.
- 또한 국내외 무역 관련 정책의 조정과 원가상승 요인의 영향을 받아 중국 수출제품의 경쟁력이 하락하였음.
- 가공무역의 "대규모 수입과 수출"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출이

하락한 동시에 원료 등 수입수요에 영향을 미쳐 외국인투자 기업의 수입비중과 수출비중이 모두 소폭 하락하였음.

□ 중국의 3대 무역 상대 국가는 각각 EU, 미국, 일본임. (2004~2010년)

- 2008년 국제금융위기에 이어 발생한 유럽채무위기 및 일본 경제의 불황 등 영향으로 국제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해외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나. 대중 투자국가(지역), 지역분포와 산업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함.

□ 중국으로 유입되는 외자는 대부분 홍콩, 마카오, 대만으로부터 유입됨.

표4. 2009년과 2010년 대중 FDI 주요 투자국가와 지역

순위	2009년			2010년		
	지역	FDI유입액 (억 달러)	비중 (%)	지역	FDI유입액 (억 달러)	비중 (%)
1	홍콩	539.93	59.97	홍콩	67.474	63.81
2	대만	65.63	7.29	대만	6.701	6.34
3	일본	41.17	4.57	싱가포르	5.657	5.35
4	싱가포르	38.86	4.32	일본	4.242	4.01
5	미국	35.76	3.97	미국	4.052	3.83
6	한국	27.03	3	한국	2.693	2.55
7	영국	14.69	1.63	영국	1.642	1.55
8	독일	12.27	1.36	프랑스	1.239	1.17
9	마카오	10	1.11	네덜란드	0.952	0.9
10	캐나다	9.59	1.07	독일	0.933	0.88
	합계	794.93	88.29	합계	95.585	90.4

자료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국 외자 통계"

- 표4는 2009년도와 2010년도 중국 FDI 주요 투자국(지역)의 구조를 보여줌.
- 중국의 FDI중에서 홍콩, 마카오와 대만으로부터 유입된 액수의 비중이 높음.
- 2009년 이들 지역으로부터 유입된 투자총액의 비중은 70%에 육박하였으며, 2010년 홍콩과 대만으로부터 유입된 투자는 전체의 70.15%로 높은 수준을 보였음.
- 최근 들어 선진 국가와 지역의 대중 FDI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중 FDI 투자지

역이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에 고도 집중된 불균형적인 패턴은 지금까지 변화가 없음.

□ 외지는 동부지역에 고도로 집중됨.

- 2011년 동부, 중부, 서부의 외자이용 현황을 보면, 동부지역의 비중이 77.92%로 절대적이며, 중부지역과 서부지역의 외자유치 비중은 각각 6.32%와 9.33%에 불과하였음(그림 1 참고).

그림 1. 2011년 중국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외자 사용 비중



자료출처: "중국 외자 통계 2012"

* 주: △동부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저장, 푸젠, 산둥, 광둥, 하이난; △중부지역: 산시(山西), 지린,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서부지역: 네이멍구, 광시, 스촨, 충칭, 구이저우, 윈난, 산시(陝西),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티벳

* 관련 부서는 은행, 증권, 보험업의 외자유치를 의미

□ 대규모 외자가 2차 산업으로 유입되었으며, 최근 3차 산업으로의 유입이 약간 늘어나고 있음.

- 2010년까지 중국의 FDI 총액에서 2차 산업에 유입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이 63.43%였음.
- 산업구조별로 보면, 2010년 중국 외자유치 상위 4위권을 차지한 산업은 제조업(46.9%), 부동산업(22.68%),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6.74%), 도매와 소매업(6.24%)임.

그림 2. 2010년까지 중국 FDI의 주요 산업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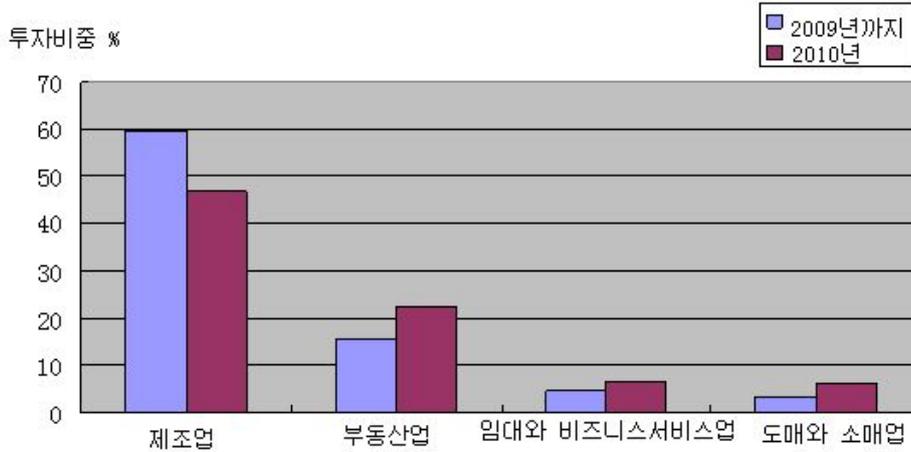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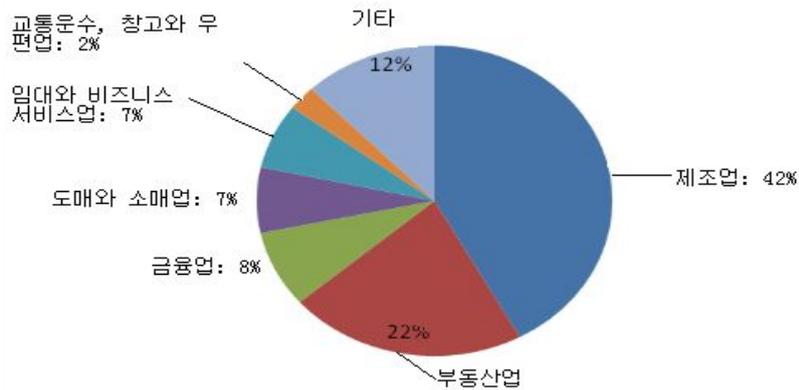


그림 3. 2011년 중국 산업별 실제 외자 사용액 비중



- 과거 데이터와 비교해 2011년 전체 FDI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2.02%) 어느 정도 하락하고 부동산업, 임대와 비즈니스서비스업, 도매와 소매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약간 높아졌지만, 여전히 제조업으로의 유입비중이 가장 높음.

□ 2011년 중국 대외무역의 구성 (기업성질별)

- 민영기업과 국유기업, 외국인투자 기업이 각각 28.0%, 20.9%, 51.1%로, 2010년 대비 민영기업은 2.8%p 상승하였고 국유기업과 외국인투자 기업은 각각 0.1%p와 2.8%p 하락하였음.

다. FTA전략 추진이 도전에 직면

□ 중국의 FTA 추진 현황

- 최근 몇 년간 국제경제 형세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고 아태지역 경제협력도 패턴조정에 직면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정부는 2007년에 최초로 "FTA전략 실시를 통해 양자와 다자간 경제무역 협력 강화"를 제시하였음.
- 뿐만 아니라 2011년 3월 "12.5"규획 강요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은 "FTA전략을 가속화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음.
- 지금까지 중국은 전 세계 28개 국가/지역과 15개 FTA 체결 협상 중에 있으며, 그중 9개 FTA협정을 체결 및 발효하였음.

표5. 2012년 12월 기준 중국의 국제/지역 경제협력 현황

지역	명칭	현황
아시아-태평양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2001년 5월에 가입
동아시아	대륙과 홍콩, 마카오의 CEPA	2003년 체결, 2004년 1월 1일부터 발효
	중-아세안 FTA (CAFTA)	2002년에 체결, 2004년에 초기수확 계획 실시 및 "상품무역협정" 체결, 2005년에 "상품무역협정" 실시, 2007년 1월에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및 7월부터 실시, 2009년에 "투자협정" 체결, 2010년에 기본 완성
	중-싱가포르 FTA 협정	2008년 10월 23일에 체결
남아시아	중-파키스탄 FTA 협정	2005년 12월에 "초기수확 협정" 체결, 2006년 1월 1일부터 실시, 2006년 11월에 "FTA협정" 체결, 2009년 2월 21일에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라틴 아메리카	중-칠레 FTA 협정	2005년 11월에 체결, 2006년 10월에 실시, 2008년 4월에 "서비스무역협정" 체결
	중-페루 FTA 협정	2009년 4월 28일에 체결
	중-코스타리카 FTA 협정	2010년 4월 8일에 체결
대양주	중-뉴질랜드 FTA 협정	2008년 4월 7일에 체결

자료출처: 상무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정리

□ FTA 추진 중의 어려움

- FTA 추진 중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바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임.
- TPP는 2005년 6월 3일에 브루나이,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2006년 5월 28일에 발효하였으며 "P4"로 불리기도 함.
- TPP는 2015년까지 예외 없이 모든 회원국 간의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요구하며, 무역, 투자, 금융,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지적재산권, 무역 분쟁 해결 등을 포함함.
-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동의를 거쳐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음.
 - 2008년 9월 22일 미국이 TPP에 가입한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동 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기존 TPP회원국은 이미 12개에 달하였고, 이는 중국이 장시간 참여하여 온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 체제인 "10+1", "10+3", "10+6", APEC 등에 도전을 가져다 줄 것임.
- FTA 추진의 또 다른 어려움은 바로 주변국가임.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국제 및 지역 정세 변화로 인해 아시아 각국은 점차 지역협력을 중시하고 지역경제 통합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표6. 중국 주변의 지역무역 협정(RTA) (2012년 10월 기준)

RTA 명칭	포함범위	종류	발효시간
아세안	상품무역	FTA	28-Jan-1992
아세안-일본	상품무역	FTA	1-Dec-2008
아세안-중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PSA&EIA	21-Sep-2005 (G) 26-Jun-2008 (S)
아세안-한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10 (G) 1-May-2009 (S)
아세안-인도	상품무역	FTA	1-Jan-2010
아세안-호주-뉴질랜드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10
일본-칠레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3-Sep-2007
일본-브루나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31-Jul-2008
일본-인도네시아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ul-2008
일본-말레이시아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3-Jul-2006
일본-멕시코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pr-2005
일본-필리핀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1-Dec-2008
일본-싱가포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30-Nov-2002
일본-스웨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Sep-2009
일본-태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Nov-2007

RTA 명칭	포함범위	종류	발효시간
일본-베트남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Oct-2009
일본-아세안	상품무역	FTA	1-Dec-2008
한국-칠레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pr-2004
한국-싱가포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2-Mar-2006
한국-인도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10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Sep-2006
한국-EU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ul-2011
한국-페루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ug-2011
한국-미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5-Mar-2012
한국-아세안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10 (G) 1-May-2009 (S)
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3
싱가포르-미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4
싱가포르-요르단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22-Aug-2005
싱가포르-뉴질랜드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1
싱가포르-페루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ug-2009
싱가포르-호주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28-Jul-2003
싱가포르-파나마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24-Jul-2006
싱가포르-중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9
싱가포르-일본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30-Nov-2002
싱가포르-한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2-Mar-2006
태국-호주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5
태국-뉴질랜드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ul-2005
태국-라오스	상품무역	PSA	20-Jun-1991
태국-일본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Nov-2007
인도-칠레	상품무역	PTA	17-Aug-2007
인도-아프가니스탄	상품무역	PTA	13-May-2003
인도-부탄	상품무역	PTA	29-Jul-2006
인도-싱가포르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ug-2005
인도-스리랑카	상품무역	FTA	15-Dec-2001
인도-일본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Aug-2011
인도-한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10
인도-말레이시아	상품무역	PSA	1-Jul-2011
인도-네팔	상품무역	PSA	27-Oct-2009
인도-아세안	상품무역	FTA	1-Jan-2010
파키스탄-말레이시아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1-Jan-2008
파키스탄-스리랑카	상품무역	FTA	12-Jun-2005
파키스탄-중국	상품무역/서비스무역	FTA&EIA	01-Jul-2007 (G) 10-Oct-2009 (S)

자료출처: WTO 공식 홈페이지(<http://www.wto.org>) 자료를 정리

- 표6에서 보면 2012년 10월까지 동남아의 아세안, 싱가포르, 동북아의 일본, 한국, 남아시아의 인도, 파키스탄 등 아시아 주요 경제체는 적지 않은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하였음.

- 그중 일본, 한국, 싱가포르 및 인도가 체결 발효한 지역무역 협정은 모두 10개 내외에 달하였음.

표7. 1994~2007년 EU의 대중 반덤핑 및 대외 반덤핑 건수

단계	연도	A (건)	B (건)	C (%)
T1	1994	5	45	11.1
	1995	5	29	17.2
	1996	6	25	24.0
	1997	5	44	11.3
	1998	1	29	3.4
	1999	12	88	13.6
	2000	6	29	20.6
T2	2001	1	33	3.0
	2002	4	23	17.3
	2003	3	8	27.5
	2004	9	29	31.0
	2005	8	25	32.0
	2006	12	35	34.3
	2007	6	9	66.6

자료출처: EU위원회가 유럽회의에 제출한 유럽공동체 반덤핑과 반보조금 연도 보고서

※ 주: △ A는 EU의 대중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건수, △ B는 EU의 반덤핑 총 건수, △ C는 EU의 대중 수입제품에 대한 반덤핑 건수가 전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

2. 2013년 중국 경제무역의 정책 방향

가. 2013년 국내의 환경변화

□ 2013년 국제경제 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 변수가 많으며, 세계경제 저속 성장세는 여전히 지속될 것임.

- 국제환경을 보면 중국의 성장은 여전히 중요한 전략적 기회의 시기이지만, 국제 환경과 여건상 큰 변화가 발생하였음.
- 중국이 직면한 기회는 더 이상 글로벌 분업체계 참여, 수출 확대, 투자 가속화의 간단한 전통적 기회가 아니라 내수확대, 혁신능력 향상,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 촉진이라는 새로운 기회인 것임.

- 각종 형태의 보호주의가 현저하게 대두하고 잠재 인플레이션과 자산버블 압력이 증대되며, 세계경제는 위기 전의 고속발전 시기에서 전환 조정기에 진입하였음.

나. 2012년 12월 16일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제시한 방향

- 향후 일정 기간 중국 경제성장의 전체 방향은 경제성장 방식의 전환이고 질과 성과를 중시하는 것임.
- 즉 중국 경제는 과거 양적 확장, 외수형 성장에서 질적 성장, 내외 통합형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됨.

다. 2013년 중국 경제무역 정책의 핵심내용

- 도시화를 적극 추진하고 내수확대에 중점을 둬.
 - 어떻게 내수확대를 추진할 것인가? 답안은 바로 중국의 도시화를 추진하는 것임.
 -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도시화를 추진하고 도시화의 질을 향상시켜야 함.
 - 도시화는 중국 현대화 건설의 역사적 임무일 뿐만 아니라 내수확대의 가장 큰 잠재력이기 때문에 도시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발전추세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유리한 것만 추구하고, 해로운 것은 피하며 도시화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유도해야 함.
 - 과학적 합리적인 도시 구조를 구축하고 대중소 도시와 소도시, 도시군의 과학적인 분포를 실현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산업구조가 밀접히 연결되고 자원 환경 수용능력에 부합해야 함.
 - 농업인구의 도시주민 이전을 중요한 임무로 추진해야 함.
 - 생태문명 이념과 원칙을 도시화 전 과정에 전면적으로 융합시키고 집약, 스마트, 녹색, 저탄소의 신형 도시화 길을 걸어야 함.
-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특히 "구조적 감세"를 추진함.

- 2013년 중국경제는 반드시 "성장률 안정화"를 실현해야 하되,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하여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할 것임.
-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2008년의 국제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한 "지출증가"와는 다르며, 그 핵심은 바로 "세계개혁과의 결합을 통해 구조적 감세정책을 완비"하는 것임.
 - 중국 현행 세제 구조 하에서 간접세 혹은 유통세에 귀속되는 조세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를 포함함.
 - 그중 부가가치세의 소득비중은 2010년의 경우 조세소득 총액의 39.5%를 차지하였고 소비세와 영업세는 각각 9.9%와 14.4%를 차지하였음.
 - 현재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 시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영업세의 부가가치세로의 전환"이 전면적으로 추진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어서기 때문에 구조적 감세의 주 대상은 바로 부가가치세임.
 - 구조적 감세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 중국의 부가가치세의 전반적인 조세부담 수준은 하락할 것이고 이는 중국기업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2013년 중국의 통화정책은 여전히 "소폭 조정" 방식을 취할 것임을 의미함.
- 즉 지급준비율이나 금리를 소폭 조정할 것이며, 특히 "도(度)를 잘 파악하여 조작의 융통성을 제고하며, 사회 용자 총규모를 적절히 확대하고 대출의 적절한 증가를 유지하며, 위안화 환율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실물경제 성장에 필요한 용자비용을 낮추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조정정책을 계속하여 실시"할 것을 강조함.

□ 산업구조 조정을 가속화하고 혁신을 장려함.

- 2012년 11월 제18차 당대표대회 보고에서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을 추진하고 이는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주요 방향"임을 지적하였음.
- 경제구조 전략적 조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통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산업별로 생산과잉 문제를 해결함. 관련 정부부서는 전통산업의 고도화를 계속하여 추진할 것임.

- 예컨대 ① 계속하여 중점산업 진흥과 기술개조 투자 사업을 실시, ② 다양한 지역, 산업, 소유제 사이에서의 석탄, 철강, 석유화학 등 산업의 M&A를 추진, ③ 낙후한 생산능력 도태 목표와 임무를 제정함.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국제금융위기 이후 형성된 부도기제(倒逼机制)를 통한 생산능력 과잉 문제 해소를 중점업무로 하고", "생산능력 과잉 산업별 발전추세에 대한 예측을 강화하고 대응적인 조정과 해결방안을 제정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둘째, 전략적 신흥 산업, 선진 제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함.
- ① 중국은 투자, 조세, 금융, 인력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더 한층 제정, ② 전략적 신흥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산업의 육성 추진, ③ 혁신을 강화하고 국가 자주혁신 능력 건설 계획을 전면 실시, ④ 기업의 R&D투입 확대를 장려/지원, ⑤ 산업목표가 명확한 국가 중점 과학기술 사업 등을 주도하여 실시할 것임.
- 셋째, 서비스업, 특히 현대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함.
- 현재 중국은 무역대국으로 부상하였지만 서비스 무역 발전은 상품무역보다 낙후하며 중국 대외무역 종합실력의 향상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었음.
 - 그 원인은 주로 중국의 3차 산업 발전이 낙후하고 산업 관련 능력이 미약하며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강하지 못해 일정 정도 중국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제한하였음.
 - 중국의 제조업 수준 향상과 더불어 서비스업의 발전은 중국이 대외무역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는 주된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13년 산업정책은 여전히 서비스업의 발전을 장려할 것임.

□ 민간투자 확대, 소·미형(小微)기업의 발전을 지원함.

-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소·미형기업의 발전을 우대하고 지원해야 함"을 지적하였음.
-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소·미형기업은 70%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90% 이상의 신규 노동자의 고용을 실현하며, 75%의 과학기술 혁신과 80%의 신제품을 창조하였음.
- 소·미형기업은 중국 고용창출의 중요한 루트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농발전의

중요한 토대이기도 함.

- 하지만 중국의 소·미형기업은 장기간 융자난 등 발전을 제약하는 난관에 직면해 있음.
- 2012년 5월 국무원은 "소·미형 기업의 건전한 발전 지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부 정책원칙을 명확화 하였으며 향후 정부는 소·미형기업에 대한 융자비용 감소, 조세부담 경감 등 지원정책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됨.
- 예컨대 ① 소·미형 기업에 대한 기업소득세 50% 감면 정책을 2015년 말까지 연장 실시하고 범위를 확대, ② 2011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금융기관과 소·미형 기업이 체결한 대출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를 면제, ③ 2011년 중앙재정에서 128.7억 위안의 중소기업 전문 자금을 지원한데 이어 2012년 전문자금 총규모를 141.7억 위안으로 확대하며 향후 매년 증가, ④ 중앙재정은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자금, 중소기업 발전 전문자금, 중소기업 국제시장 개척자금, 중소기업 공공서비스체계 전문 보조자금, 중소형 비즈니스기업 발전 전문자금 등 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진보, 구조조정, 시장개척, 공공서비스 개선 및 융자환경을 장려함.

□ 외자와 대외무역을 안정시키고 국제수지 균형을 달성함.

- 심각한 세계경제 정세와 복잡한 국제환경에 직면한 중국은 "더욱 적극적인 개방전략을 실시하고 새로운 경쟁우위를 형성하며 개방형 경제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함".
- 즉 "국제 시장점유율을 안정화하고 확대하며, 구조조정에서 수입의 지원역할을 강화하며 국제수지의 균형을 촉진하는" 동시에 "외국인투자 권리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외자 사용 규모를 안정화하며 대외투자를 확대하며, 계속해서 양자간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고 FTA전략을 실시할 것임".

<질의·응답>

질문 1.

중국의 수출제품에 대해 해외정부가 반덤핑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외국 시장 점유율 확대가 둔화되고 있다고 언급하셨는데, 중국정부는 관세 인하 등을 통해 자

유무역을 촉진시킬 계획은 없는가? 특히 상무부 등 정부부처는 사치품, 첨단 기술제품 등의 관세를 인하할 의향이 없는가?

답변 1.

최근 홍콩이나 해외의 사치품 매장에서 중국인들이 줄을 서서 한 번에 많은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음.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지금의 중국과 비슷한 시기를 겪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함. 이는 이제 막 일정정도의 경제성장 단계에 진입한 국가 국민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함.

국내에서 사치품의 관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중국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하이난(海南)에 면세점을 설립하였지만, 구입 제한액을 5,000위안으로 정하였음. 사치품에 대해 일정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 조정 폭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판단됨.

그 외 기타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FTA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예컨대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 혹은 이미 발효된 중-아세안 FTA 등 모든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상품의 관세 인하임.

질문 2.

내년도 중국경제의 핵심 중의 하나가 도시화인데 중국 표현으로는 "성진화(城鎮化)"와 "성시화(城市化)" 두 가지가 있음. 이 두 가지 용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2013년에도 계속하여 안정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금리조정은 핫머니 유입에 대한 우려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지금 중국의 상황으로는 금리를 조정할 경우 금리인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핫머니의 유입을 우려하는가?

답변 2.

개인적으로 "성진화(城鎮化)"는 반도시화 수준을 의미한다고 생각함. 중국은 농촌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 번에 도시화를 실현하기 어려움. 그중 일부 농촌은 인프라시설이 낙후하고 아주 가난하기 때문에 단번에 도시화를 실현하기 어려운 것임.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성진화(城鎮化)"는 "성시화(城市化)"보다 도시화 수준이 한 단계 낮은 수준임. 즉 "성진화(城鎮化)"는 농촌과 도시 사이에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중국의 현실에 더욱 부합된다고 생각함.

현재 중국의 금리 조정 시 금리 인하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음. 금리를 쉽게 인하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중국 거시정책 조정의 난제인 부동산가격임. 만약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 조정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됨. 즉 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부동산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우려해 금리를 쉽게 인하하지 못하는 것임. 중국의 도시화는 건축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동반하게 될 것임.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 인플레이션은 홀시할 수 없는 부분임.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인상해야지 인하할 수 없음. 하지만 이런 조정 폭은 상당히 작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것임. 물론 특수한 시점에 소폭 인하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 인하폭은 상당히 작을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금리를 인하할지라도 미국,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중국의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핫머니의 유출보다 유입에 대한 우려가 여전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3: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었음. 한국의 경험에서 보면 한국은 금액의 95% 이상의 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었지만, 협상이 시작된 후에는 예상과 달리 중국이 낮은 수준을 희망하고 있음. 중국이 낮은 수준을 주장함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답변 3.

한중 FTA가 높은 수준이나 낮은 수준이나를 둘러싸고 논쟁이 많음. 개인적으로 높은 수준의 FTA를 희망하고 한국에서도 이런 의향을 보이고 있음. 학자 입장에서 볼 때,

양국 간 높은 수준의 FTA는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TPP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일종의 win-win 게임이라고도 할 수 있음.

학자들은 높은 수준의 FTA를 선호하지만 정부차원, 특히 상무부 차원에서 보면, 중국 기업이 과연 높은 수준의 FTA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큼. 즉 중국 정부는 산업계의 반대의견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FTA 협상에 있어, 중국보다 한국의 경험이 더욱 풍부함. 특히 한국은 이미 미국, EU 등 선진국과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한국기업이 중국기업보다 FTA로 인한 충격을 더욱 잘 감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중국정부는 FTA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낮은 수준을 더욱 선호할 것임. 또한 한중 FTA가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한중일 FTA는 과연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도 고민할 것임.

질문 4.

중국과 FTA 체결한 9개 국가와 지역을 보면, 제조업이 강한 국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중국이 한중 FTA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됨. 하지만, 대만과 체결한 ECFA의 경우 조기수확의 대다수 품목이 제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중국기업도 어느 정도 감당해왔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한국과의 FTA에 대해 중국 기업의 우려가 왜 이렇게 큰 것인가?

답변 4.

우선 ECFA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FTA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산업에 충격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만약 관세철폐 범위를 95%로 확대할 경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 ECFA 상품무역에 대한 협상은 아직도 추진 중에 있으며, 아마 한중 FTA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 개방수준도 95%에 이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질문 5.

중국이 FTA를 적극 추진함에 있어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 TPP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나 전략은 무엇인가?

답변 5.

사실 중국정부는 2008년 전까지 TPP를 별로 중시하지 않았음. 2008년 미국이 TPP에 가입하고 동아시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후 중국은 TPP가 기존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일종 도전이라는 인식을 가지기 시작하였음. 2009년과 2010년에 중국은 TPP에 부담을 가지게 되었음. 2011년부터 중국은 TPP에 더욱 많이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조치도 점차 다양화되기 시작하였음. 중국에서는 TPP에 대해 ① 적극 가입하여 TPP 협상 과정을 제대로 파악, ② TPP에 관여하지 말기, ③ 적절한 시기에 가입하기 등 3가지 견해가 있었으며, TPP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입장은 밝힌 적이 없었음.

2011년 이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FTA나 동아시아 지역통합에서 중국정부는 현재 한중 FTA 협상과 한중일 FTA 협상에 중점을 두고 있음. 비록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으로 TPP에 대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나 현재 중국은 TPP에 관여하기 보다는 중국과 밀접한 무역관계나 산업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지역과의 FTA 추진에 더욱 적극적임. 한중일 3국은 명확한 산업공급 체인을 형성하였고 동아시아의 생산라인을 구축하였음. 따라서 한중 FTA와 한중일 FTA 추진이 TPP보다 훨씬 중요함.